

# 김승환 교육감, 항소심서 벌금형

### 재판부 “임용권자 권한 남용”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 1000만원 선고

### 김 교육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상고를 통해 오명을 벗겠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벌금형

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재판관)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및 관리령

사범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근영 절차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하고 근영에 개입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지만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인사 업무의 객관·공정·투명성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사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다 발령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교육감 기간 근영개입 횟수가 4회에 그친 점, 인사청탁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누구보다 청렴을 지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리로 얼룩진 전북교육을 청렴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대가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상고를 통해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측근을 승진시켰다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교육감 측근은 함께 일하는 모든 공직자”라며 “이번 인사 개입이 부당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영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평가를 벗어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1월 4일 전주지법 형사 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근영 수정을 지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는 하다”면서도 “확정된 승진후보자 명부 자료안에 맞춰 근영점(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장은성 기자



지난 16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 앞에서 '직권남용관리령사범해' 혐의로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도의원 선거 후보자 재산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북도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씨를 후보자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6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완산구선거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본인의 임대채무 금액 등 9억8천여만원을 후보자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및 선거공보 등에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거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이항로 진안군수 1심서 벌금형

### 재판부 '인사권 남용' 혐의... 500만원 선고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61) 진안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고승환 부장판사)은 16일 직권남용관리령사범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지방보건법 규정을 위반하고 정보 인사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같은 인사 행위는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공직사회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쳐 비단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적인 이득을 취한 증거가 없고, 지방 특성상 보건직별 공무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 사건이 불거진 뒤 처리된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재판 직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군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의료소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군수는 보건의료소에 보건의료 직원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임용하면 지방보건의료에 위배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보건의료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의료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해야 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군수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평가를 벗어나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했지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직질차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군수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송효철 기자



속 깊은 복지정책 컨트롤타워 '전주사람' 창립식에서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이 출범한다. 전주시는 16일 시청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복지재단인 '전주사람' 이사 등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은 시민의 행복이 중심 되는 온전한 사회의 도시 전주 만들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 성황

### 전주시-드론축구협회, 전주대에서 성인·유소년부 동시에

### 드리블대회·코딩시연·인형뽑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

전주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협회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17일 전주대학교에서 '2018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을 전국 성인부 35개팀과 유소년부 1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오는 2025 전주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를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전주를 드론축구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오는 2025년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회로 △드론축구 드리블대회(개인전) △드론축구 코딩시연 및 체험 △드론축구 인형뽑기 등 시민들이 참여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상과 신인상, 조별예선 1위 팀에 대한 수상이 진행되는 등 총 44개의 상장과 총 2,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돼 대회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와 관련, 시가 최첨단 탄소소재와 드론, ICT기술을 융·복합해 세계 최초 개발하고 보급한 드론축구는 기존 드론 제조시장 대부분을 중국이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현재 대한드론축구협회 전국 16개 지부에는 100여개 팀이 창단됐으며, 영국과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 4개국에도 해외 선수단이 창단됐다.

시는 향후에도 드론축구 전국대회를 확대 개최함으로써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 글로벌 투자기업 및 관람객들에게 드론축구를 널리 홍보하고, 신산업 박람회 등에서 드론축구 시연·체험부스를 운영해 드론축구 저변 확대에 나서는 등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를 향한 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전국에 알림

### 사회주택 사업자 워크숍... 청년 위한 '달팽이집' 등 현장 견학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이 전국으로 소개된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전국 사회주택 사업자간 네트워크 형성과 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2018 사회주택 사업자 워크숍'을 전주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행정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공동 출자해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후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이번 워크숍이 전국 최초로 전주에서 열린 것은 전주시가 그동안 청년들을 위한 동완산동 '전주달팽이집'과 팔복새마을을 내 사회주택 '추천' 등 다양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2017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전국 지자체 중 주거복지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일등도시로 인정을 받은 때문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회주택 사업자와 한국사회주택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주지역의 사회주택 현장을 둘러봤다.

또한, 청년대상 사회주택인 동완산동 '전주달팽이집'과 팔복새마을을 사회주택 '추천' 현장을 견학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사회주택 관계자는 "사회주택은 주택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이라며 "시장에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 우선 공급하고 부담 가능한 임대료와 제한적인 인상의 적용,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기간,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영리(제한적 영리) 사업체제의 공급과 운영 등 사업체제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제준 시 주거복지과장은 "처음으로 개최된 사회주택 워크숍이 전주에서 열려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동완산동 7기구와 팔복새마을을 사회주택 8기구 등 총 15기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올해는 중화산동에 여성청년들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성청년안심주택' 15기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 인천 아파트 옥상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 구속

인천 한 아파트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A(14)군과 B(15)양 등 4명 전원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법 장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친구인 C(14)군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 때린 뒤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폭행은 있었지만 C군이 스스로 뛰어 내렸다”고 진술했다.

A군 등과 C군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조사됐다. /뉴시스

## 경찰 “양진호 웹하드카르텔 실제 소유주 실제 확인”

### 필터링 업체·헤비업로더 등과 유착 음란물 유통 주도

경찰이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 디지털장사 업체의 실소유주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음란물 유통의 웹하드 카르텔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합동전담팀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양 전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 대표들과 양 회장의 통화내역, 웹하드 업체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정황 등을 토대로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의 실소유주로 보고,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헤비업로더 등과 유착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

로 판단했다. 양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웹하드 사이트에 회원들이 음란물을 요청하는 게시판을 만들고, 헤비업로더들이 이 게시판에 매달 30건 이상 음란물을 올리도록 했고, 업로더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하고, 음란물 업로더를 '우회회원'으로 등급을 매겨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업로더들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불법 촬영된 개인 간 성적영상물도 100여 건 포함돼 있다.

경찰이 파악한 불법음란물 유통 사례 5만2500여 건, 저작재산권 침해 230여 건이며, 이를 통해 부당이득 70여억 원을 챙겼다.

경찰은 필터링 업체가 웹하드 업

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점과 웹하드 업체의 회계 책임자가 필터링 업체의 회계를 담당한 점을 토대로 양 회장이 필터링 업체 실소유주라고 지목했다.

이 필터링 업체는 유료된 음란물을 제대로 거르지 않고, 오히려 자극적인 제목의 음란 동영상에 유료되게 방치하는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진관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매출 600여억 원 가운데 70여억 원 이상이 범죄 수익이다. 추가 수사에서 늘어날 수 있다”며 “확인한 혐의는 검찰에 넘기지만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용된 혐의만 10건에 이른다. /뉴시스

##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전주시는 지난 16일 팔복예술공장에서 35개 동 주민센터 아동복지담당 직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 학대 및 범죄 신고 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등으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또한, 교육 후에는 참석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속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심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의 시간도 진행했다.

/송효철 기자